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연합뉴스사 임원 요건 강화 및 선임 절차 개선 등 〉  
■ 양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89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2  |
| 1. 연합뉴스사 임원의 전문성 요건 명시 및 결격사유 신설(안 제14조, 제16조) .....                | 2  |
| 2.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확대(안 제26조) .....                         | 6  |
| 3. 연합뉴스 대표이사 추천 방식 변경 및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 설치 등(안 제29조, 제30조의2 신설 등) ..... | 11 |
| ※ 참고자료 .....                                                        | 15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양문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3. 11.

다. 회 부 일 : 2026. 3. 1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진흥회의 이사와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연합뉴스사의 보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계약사 및 내부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움. 또한 연합뉴스사의 임원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이에 연합뉴스사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독립성, 중립성,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흥회의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며, 연합뉴스사 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6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0조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연합뉴스사 임원의 전문성 요건 명시 및 결격사유 신설(안 제14조, 제16조)

개정안은 연합뉴스사의 임원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하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형법」 제303조에 규정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4조(임원의 선임 등) ① 연합뉴스사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 제14조(임원의 선임 등) ① -----<br>-----<br>-----두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연합뉴스사의 임원이 될 수 없 |

| 현행                         | 개정안                                |
|----------------------------|------------------------------------|
| 연합뉴스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 다.<br>② 그 밖에 연합뉴스사의-----<br>-----. |

현행법<sup>1)</sup>은 연합뉴스사가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

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위 및 업무)** ①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데이터 및 사진·영상 등의 공급
2. 외국의 주요 공공기관, 언론매체,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영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를 통한 뉴스·데이터 및 사진·영상 등의 공급
3. 대학, 공공도서관,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데이터 및 사진·영상 등의 공급
4.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 국제친선, 문화교류, 재외교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대외뉴스통신 업무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③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등)** ① 연합뉴스사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과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대표이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 의결로 선임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연합뉴스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4의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표이사와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으로 구성되는 임원 체계를 두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보주권 수호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임원 자격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사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도덕성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개정안은 연합뉴스사의 임원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하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sup>2)</sup>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sup>3)</sup>에 따른

을 말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임원의 자격 기준을 보완하고 성범죄 전력에 관한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전문성·도덕성을 겸비한 임원 선임으로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공정한 업무수행 및 책임경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연합뉴스사 임원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임원 선임의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확대(안 제26조)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의 수를 현행 7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고, 연합뉴스사 임직원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사람 2명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을 추가하며, 이사 추천 주체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사 추천 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26조(임원) ① -----<br>-----11명-----<br>-----.<br>-----<br>-----.                                                                                                                                                |
|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④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후단 신설><br><신설><br><신설> | ④ -----<br>-----<br>---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br><br>1.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2명<br>2.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3명 |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3. 연합뉴스사 임직원 과반수가 보도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
| <신설>       | 4.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2명                                                                                                 |
| <신설>       | 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뉴스통신·언론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
| <신설>       |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br>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br>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br>3. 추천 이유 |
| ⑤ ~ ⑧ (생략) | ⑥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

현행법<sup>4)</sup>은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설립 등) ①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두고, 진흥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과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 
- 제2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원이 된 임원을 임명한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④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 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 ⑥ 감사는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 ⑧ 진흥회는 임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진흥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4의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각각 대표하는 전국조직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진흥회 이사 선임과정을 감안할 때 뉴스통신진흥회 임원 구성과 관련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고, 연합뉴스사의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sup>5)</sup>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진흥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연합뉴스사 임직원과 뉴스통신·언론 관련 학회가 이사 추천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등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진흥회 이사 구성의 대표성과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의 인적구성 다변화를 통해 특정 추천 주체의 영향력을 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대표성 및 공정성을

---

5) 국회에서 2026년 2월 26일 개최된 “연합뉴스 지배구조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사회 각계 대표성을 반영한 진흥회 이사회 구성 확대 필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자료: 「연합뉴스 지배구조개선 국회 토론회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 필요성 ‘공감」, 연합뉴스, 2026.3.6.

또한, 이 외에도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가 2025년 12월 연합뉴스 전체 구성원 7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8%가 진흥회 이사 확대를 통한 정치후견주의 청산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됨.

\* 자료: 「연합뉴스 구성원 67% “진흥법 개정 필요”... 1순위는 ‘재정안정화」, 미디어오늘, 2025.12.19.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수를 확대하고 연합뉴스사 임직원과 뉴스통신·언론 관련 학회가 이사 추천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진흥회 운영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 3. 연합뉴스 대표이사 추천 방식 변경 및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 설치 등(안 제29조, 제30조의2 신설 등)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에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를 두고, 이사회가 검증위원회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대표이사후보자를 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9조(이사회 구성 등) ① ~ ③<br>(생략)<br>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다만,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 제29조(이사회 구성 등) ① ~ ③<br>(현행과 같음)<br>④ -----<br>-----<br>----- <u>. 다만,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가 추천한 대표이사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br>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 |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p>⑤ ~ ⑦ (생략)</p> <p>제30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 5. (생략)</p> <p><u>&lt;신설&gt;</u></p> <p>6. (생략)</p> <p><u>&lt;신설&gt;</u></p> | <p><u>득표자를 추천한다.</u></p> <p>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p> <p>제30조(이사회 기능) -----<br/>-----.</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의 구성</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u>제30조의2(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검증위원회(이하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②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는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u></p> <p>1. <u>연합뉴스사와 전제 계약을 맺고 있는 언론사</u></p> <p>2. <u>제1호 외의 언론 관련 단체, 수용자권익위원회, 변호사단체 등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u></p> <p><u>③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는 대표이사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u></p> |

| 현행 | 개정안                                                                                                                                                 |
|----|-----------------------------------------------------------------------------------------------------------------------------------------------------|
|    | <p>한다.</p> <p>④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대표이사후보자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p> <p>⑤ 그 밖에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대표이사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p> |

현행법<sup>6)</sup>은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회에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를 두고, 위원 수와 대표이

6)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사의 구성 등) ① 진흥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면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후보자 추천 과정 등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대표이사후보자를 의결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거쳐 다수득표자를 대표이사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 설치와 대표이사 추천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천 기한과 결선투표 절차를 명문화하여 대표이사후보자 추천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사회의 대표이사 추천 기한과 방식을 구체화하고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절차를 개선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76 |

## □ 연합뉴스 개요

- **(연혁)** 연합통신 창사(동양통신·합동통신·기타통신사 통합, '80.12), 연합뉴스로 사명 변경('98.12)
- **(법적지위)** 뉴스통신법상 국가기간(基幹)뉴스통신사\*, 상법상 주식회사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적기능 수행 비용 일부 정부 지원('26년 기준 279억원)
- **(소유구조)** 뉴스통신진흥회(대주주) 30.77%, KBS 27.77% 등

| 구분            |             |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뉴스통신진흥회       |             | 61,000주  | 30.77  |             |
| 방송사<br>(18개사) | K B S       | 55,055주  | 27.77  |             |
|               | M B C       | 44,217주  | 22.30  |             |
|               | 지방MBC(16개사) | 4,811주   | 2.43   | 0.04%~0.33% |
|               | 소 계         | 104,083주 | 52.5   |             |
| 신문사<br>(18개사) | 중앙지(9개사)*   | 23,421주  | 11.82  | 0.46%~1.84% |
|               | 지방지(9개사)**  | 9,737주   | 4.91   | 0.31%~0.92% |
|               | 소 계         | 33,158주  | 16.73  |             |
| 합 계           |             | 198,241주 | 100.00 | 37개사        |

\* 중앙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코리아헤럴드

\*\* 부산일보, 매일신문, 광주일보, 대전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충청일보, 강원일보, 전북일보

- **(조직)** (조직) 2실 5국 1본부 2센터 1위원회 1교류단 / 임직원 764명(기자556명) / 해외취재망(19개국 22지역(미국 4개 지역)) 36명
- **(임원)** 황대일 사장, 상무이사 3명, 감사 1명  
\* 임기 : 2024.10.10.~2027.10.09.(3년)

## □ 정부 지원 현황

- **(근거)** 「뉴스통신법」 제10조(지위 및 업무), 제20조(위탁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등  
\*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 정부에서 관련 비용 부담 가능
- **(내용)** 국가기간통신사(연합뉴스)가 정보주권 수호, 국민 알권리 충족 및 정보격차 해소 등 공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적기능 비용 일부 보전  
\* 해외뉴스, 외국어뉴스, 지역뉴스(재해재난포함), 남북한·재외동포뉴스, 대외뉴스통신, 뉴스통신산업진흥(연합뉴스 경영감독기관인 뉴스통신진흥회 지원) 등 6개

<'20년 이후 정부 지원 현황(단위 : 억원)>

|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7년<br>정부안 |
|----------|------|------|------|------|------|------------------|------|-------------|
| 지원규모     | 319  | 328  | 328  | 279  | 50   | 254<br>(추경204포함) | 279  | 279         |
| - 공적기능지원 | 288  | 297  | 299  | 250  | 50   | 254              | 279  | 279         |
| - 뉴스사용료  | 31   | 31   | 29   | 29   | -    | -                | -    | -           |

※ 뉴스사용료(정부가 PC·모바일 등으로 뉴스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는 '24년부터 각 부처에서 예산 편성

## 참고 2

## 협회 및 민간업계 의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 부처 의견

| 협회명<br>(의견제출일자)   | 의견 주요내용                                                                                                                                                                                                                                                                                                                                                                                                                                                                                                                                                                                                                          |
|-------------------|----------------------------------------------------------------------------------------------------------------------------------------------------------------------------------------------------------------------------------------------------------------------------------------------------------------------------------------------------------------------------------------------------------------------------------------------------------------------------------------------------------------------------------------------------------------------------------------------------------------------------------|
| 법무부<br>(26.5.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완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뉴스사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독립성, 중립성,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취지 공감</li> <li>- 다만, 안 제16조제1항은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를 범한 자만을 추가하고 있는바, 성범죄자를 임원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라면 결격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 필요</li> <li>* 그보다 중한 범죄를 범한 경우 결격사유 미해당 문제 발생</li> <li>- 한편, 안 제26조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의 임명권과 이사 2명에 대한 추천권도 함께 가지게 되는바 인사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임명권과 추천권을 분리할 필요는 없는지 보완 검토 필요</li> <li>- 또한, 안 제30조의2제2항제1호의 '연합뉴스사와 전재 계약을 맺고 있는 언론사'에서 '전재'라는 표현은 그 뜻을 쉽게 바로 알 수 없으므로 그 의미를 부연하거나 적어도 한자어 '轉載'를 병기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 필요</li> </ul> </li> </ul> |

### ○ 협회 의견

| 협회명<br>(의견제출일자)       | 의견 주요내용                                                                                                                                                                                                                                                                                                                                                                                                                                                                                                                                                                                                                                                                                                                                                                                                                                                      |
|-----------------------|--------------------------------------------------------------------------------------------------------------------------------------------------------------------------------------------------------------------------------------------------------------------------------------------------------------------------------------------------------------------------------------------------------------------------------------------------------------------------------------------------------------------------------------------------------------------------------------------------------------------------------------------------------------------------------------------------------------------------------------------------------------------------------------------------------------------------------------------------------------|
| 뉴스통신진흥회<br>(26.3.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수 확대 및 추천단체 추가(안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성 확장 바람직해보이나 학회 추천 2명은 과다, 일반뉴스수용자의 연합뉴스 기사 직접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타당</li> <li>* (소수입장) 현행 전국단위 신문사, 방송사 대표 협회 추천권은 상법상 맞지 않으므로 향후 지분구조 변경과 함께 정리 필요</li> </ul> </li> <li>•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 설치 등(안 제30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 선임함'이란 내용과 관련해 위원 수와 추천 주체, 추천 방식을 보다 구체화해야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임</li> </ul> </li> <li>• 신규 이사회 3개월 이내 구성(부칙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권이 바뀔 때마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이나 연합뉴스 사장을 교체하려 드는 것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언론 권력 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 3개월 이내 진흥회 이사진과 사장 교체를 못 받은 것은 우려스러움, 현 연합뉴스 사장과 이사진 퇴임에 맞추어 시행</li> </ul> </li> </ul> |

| 협회명<br>(의견제출일자)     | 의견 주요내용                                                                                                                                                                                                                                                                                                                                                                                                                                                                                                                                                                                                                                                                                                                                                                                                                                                                                                                                                                                                                                                                                                                                                                                                                                                                                                                                      |
|---------------------|----------------------------------------------------------------------------------------------------------------------------------------------------------------------------------------------------------------------------------------------------------------------------------------------------------------------------------------------------------------------------------------------------------------------------------------------------------------------------------------------------------------------------------------------------------------------------------------------------------------------------------------------------------------------------------------------------------------------------------------------------------------------------------------------------------------------------------------------------------------------------------------------------------------------------------------------------------------------------------------------------------------------------------------------------------------------------------------------------------------------------------------------------------------------------------------------------------------------------------------------------------------------------------------------------------------------------------------------|
|                     | <p>하는 경과규정을 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의견) 뉴스통신진흥회와 연합뉴스의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뉴스 독립성 보장이 필요한 상황. 정부는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또는 요율을 삭감할 수 없다는 규정 추가 및 정부 재원을 통한 뉴스통신진흥회 재원 명시 필요</li> </ul> </li> </ul>                                                                                                                                                                                                                                                                                                                                                                                                                                                                                                                                                                                                                                                                                                                                                                                                                                                                                                                                                                                                                                                                       |
| 연합뉴스<br>(‘26.3.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흥회 이사수 확대 및 추천단체 추가(안 제26조) : 삭제 또는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법은 ‘03년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된 법률로, 이사회 구성에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고려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임. 개정안은 언론계와 야당은 물론, 연합뉴스 구성원의 의견조차 수렴되지 않았음. 정치적 합의 과정 없이 일부 의원 주도로 이사회 구조를 개편하는 결과가 되어 그 자체로 정치적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li> <li>- 경영감독기관 이수 수를 11명까지 확대하는 것은 임직원 실제 경영을 책임지는 현재 연합뉴스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비해 과도한 측면</li> <li>- 이사 11명 중 최대 7명 이상이 특정 진영의 영향권에 놓일 수 있는 구조를 초래할 가능성 있음. 이는 개정안의 대표이사 선임에 필요한 정족수 5분의 3 이상(7명)을 충족하는 수치임. 또한 언론 관련 학회 3곳(2명 추천)을 문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단체 선정 단계에서 정부·정치적 영향력 개입 가능성</li> </ul> </li> <li>• 연합뉴스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 등(안 제29조, 제30조의2) : 삭제 또는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뉴스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아니라 경영에 직접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만 선임하도록 한 것은 연합뉴스가 회사로서의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li> <li>- 주주사에게 대표이사후보 추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구조로 볼 수 있으며, 상법상 주식회사 운영 원리와 조화되는 방안으로 판단</li> </ul> </li> <li>• 신규 이사회 3개월 이내 구성(부칙) :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칙으로 특정 이사들의 임기를 감축하는 것은 처분적 성격의 법률에 해당하여 위헌소지가 상당</li> <li>- 연합뉴스는 상법상 주식회사인바, 개정안 부칙은 상법 제38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임기(3년)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뉴스통신법 제14조 임원의 임기(3년)와도 충돌</li> <li>- 헌법이 보호하는 사적자치를 기반으로 한 자유시장체제를 훼손할 수 있으며, 직업의 자유를 본인들의 귀책사유 없이 과도하게 제한</li> </ul> </li> </ul> |

| <b>협회명</b><br>(의견제출일자) | <b>의견 주요내용</b>                                                                                                                                                                                                                                                                                                                                                                                                                                                                                                                                                                  |
|------------------------|---------------------------------------------------------------------------------------------------------------------------------------------------------------------------------------------------------------------------------------------------------------------------------------------------------------------------------------------------------------------------------------------------------------------------------------------------------------------------------------------------------------------------------------------------------------------------------|
| 한국신문협회<br>(26.3.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보다 오히려 갈등과 편향성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11명 중 대통령·교섭단체·학회 등이 추천하는 7명 이상이 여당·정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중립성·공정성을 해칠 우려</li> <li>* '15년 정치적 중립성 담보 불가 등의 이유로 유사 법률 개정안(배재정 의원안)이 폐기</li> <li>- 진흥회 이사 추천권을 가질 수 있는 학회를 법률 시행령에 위임해 지정하도록 하여 정부가 이사회 구성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진흥회의 독립성 약화 우려</li> <li>-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외부 기구(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를 통해서만 연합뉴스 사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상법상 이사회의 고유 권한과 경영의 자유를 제약, 연합뉴스 주주의 정당한 권리 침해 위험성</li> </ul> </li> </ul> |